

# 선거제 개혁 합의했지만... 1월 처리 '힘로'

모호한 합의내용에 시간 빠듯  
의원정수 등 각당 의견 첨예  
심상정 "이달중 개혁안 마련"

여야 5당이 지난 15일 내내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모호한 합의만 한 대다, 쟁점 사안에 대해서 각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 달 남짓한 빠른 시간 안에 이견을 좁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쟁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의 단식 농성을 불사할 정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권역별 정당정부 비례대표제가 당론이지만, 의석 배분 방식에 연동형을 적용하는 데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야 3당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인 '100% 연동형'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연동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완전 연동형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많은 민주당으로서 비례대표제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내 논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부적인 의견이 더 많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비를 조정해 마 찬가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비례대표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은 줄이는 방향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축소 문제는 현역



여야 5당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정관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를 합의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의원들의 '밥그릇'이 달린 만큼 간단히 합의되기 어려운 사안이다.  
'10% 이내 확대 여부'를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의원은 문제가 각 당의 입장차는 물론 국민 여론까지 고려해야 한다. '10% 확대'에 합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 300명에서 330명으로 늘어난다.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데 싸늘한 국민의 시선을 의식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도 여야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달 초 새해 예산안 협상과 함

께 진행된 선거제 개혁 협상에서 한국당은 노동복합형 선거구제(도시 지역은 중·대선거구, 농촌 지역은 소선거구제를 각각 채택)를 제안했고 민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 5당은 이처럼 산적한 쟁점들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에 따르겠다고 사실상 공을 쟁쟁히 뒤로 넘겼다. 선거제 개혁 추진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활동시한도 연장된 만큼, 정계특위의 논의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심 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달까지 정계특위 차원에서 안을 만들고, 남은 쟁점들은

각당 지도부와 정치협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정계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다루고 있는데, 다음주부터는 1소위를 주 3회씩 열어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계특위의 단일안을 목표로 하지만 최종적으로 단일안이 될지 복수안이 될지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을 ▲비례대표 비율 ▲소선거구제·중대선거구제 결정 ▲의원정수 확대 규모 등으로 제시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손학규·이정미 단식 중단... "이제 하고비 넘어"

야3당 불꽃집회는 예정대로  
여야의 선거제 개혁 합의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지난 15일 단식을 중단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의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째 이어 온 단식 농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6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손 대표는 농성 해단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촛불혁명으로 이뤄진 정권 교체를 제대로 민 민주주의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가 개혁의 중심이 되고 내각이 역할을 발휘하는 7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제도의 기초"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 선거제 개혁 협상에 참여한 야 3

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다만, 야 3당은 여야 5당의 합의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불꽃집회'는 예정대로 진행했다. 손 대표는 "열을 동반 단식하고 어렵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했지만, 투쟁은 지금부터"라며 "갈 길은 끝없이 남아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실하게 안어내 촛불혁명을 완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역시 "일단 고비 하나는 넘겼지만 여기서 물러설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법률로 못 박힐 때까지 싸움은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靑, 前 특감반원 '우윤근 의혹' 주장 강력 반박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 흐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기 비위 첩보로 청와대에서 쫓겨났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5일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은둔 흐리고 있다"며 "큰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에 있는 자리에서 "(김 씨) 본인의 비위를 감추고 오히려 시선들을 부풀리고 왜곡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불쾌감을 드러

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윤근 의혹은 이미 6년 전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사안"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16일 "청와대가 징류탕 같은 진실게임 뒤에 숨어 의혹이 잠잠해지지만 기대한 다면 국회가 나서 특검과 국정조사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으며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떠오르는 것은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불거진 '심상시' 문건 파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현재 대검 감찰본부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채용비리·유치원법·탄력근로제... 문 연 12월 임시국회 쟁점 수두룩

여야 쟁점 제각각 진동 예고

여야가 지난 15일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 선정에 합의했지만, 쟁점들에 대한 입장차는 크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동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계획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 김성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표결 처리를 합의했다.  
그러나 1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주요 안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간의 입장차가 상당히 충돌이 이어지는 등 연발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관련 국정조사 문제는 각당의 핵심이 꼽힌다. 여야는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하는 데 한창이 예상된다. 당장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낱낱이 밝혀겠다고 버리고 러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무리한 국정조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도 조사대상을 한정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와 관련하여도 논의 시점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민주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생각을 밝히고 있지만 한국당은 하루빨리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교비 유용 시 처벌 조항 마련과 국가관리로의 회계 일원화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한국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 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하려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내겠다는 태세를 보인다.  
김성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는 큰 어려움이 없게 채택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인준안 표결과 관련, 민주당·문연은 부결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민주평화·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중 '원포인트 분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한꺼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분회의 날짜는 논의해 할 현안이 많은 만큼 현실적으로 26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한국당 비대위 현역의원 21명 물갈이

김무성·최경환·홍문준·김용태... 친박 12·비박 9명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당협위원장 교체는 통해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물론 신임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원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향후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우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염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당협위원장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현재 당협위원장인 김경환·홍문준·권성동·김용태·윤상현·이군현·이종구·황영철·홍일표·홍문표·이완영·이재·곽상도·윤상직·정중섭 의원 등 15명의 현역 의원은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정채신 대상에 포함된 현역의원은 18.8%에 달한다.  
이기운대 김무성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의 좌장으로 불리며, 최경환·홍문준·윤상현 의원 등은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꼽힌다. 계파별로 친박계 내지 잔류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원우철·김정훈·최경환·홍문준·김재원·윤상현·이완영·이우현·곽상도·염용수·윤상직·정중섭 의원 등 12명이다. 또 비박계 내지 불망파는 김무성·권성동·김용태·이종구·이군현·이재·황영철·홍일표·홍문표 의원 등 9명이다. 특히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인적쇄신을 주도한 김용태 사무총장도 이날 교체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이날 현역의원 교체대상이 예상보다 제 개파 간 갈등을 비롯해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2개>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QR					
<b>[아파트]</b>					
2018타경 6829	1	순천시 연향동 상가길56, 106동 13층 1301호 [연향동, 동부아파트] 84.90㎡	아파트	158,000,000 158,0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7655	1	순천시 해룡면 대덕길98, 203동 3층 304호 [청송아파트] 56.40㎡	아파트	97,000,000 97,0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8085	1	광양시 구마원길11, 107동 1층 103호 [종동, 종마2주공아파트] 41.85㎡	아파트	34,000,000 34,0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52525	1	순천시 왕곡길79, 201동 12층 1203호 [조례동, 현대아파트] 84.93㎡	아파트	195,000,000 195,0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53191	1	순천시 자경3길34, 3층 9층 901호 [조곡동, 금호아파트] 84.935㎡ [안향동, 안향환자본 25동6055전부]	아파트	37,600,000 37,600,000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b>[단독주택, 다가구주택]</b>					
2018타경 7068	1	고흥군 불래면 신금리 539-1 106㎡ [박태순] 대지분2분의1전부	대	23,777,400 23,777,4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7358	1	여주시 화양면 안원리 994 제1호 37.37㎡ [제1외 다용도실 등 5㎡]	단독주택	8,050,000 8,050,000	제시외 건물포함
2018타경 52778	1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892-6 532㎡ [관내] 대지분6분의3전부	대	51,598,600 51,598,60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공유자 우선매수권행사1회로제한
2018타경 53313	1	고흥군 동강면 세곡2길 15-71 59.4㎡ [제1외 다용도실 등 42.2㎡]	단독주택	59,442,000 59,442,000	제시외 건물포함
2018타경 53375	1	순천시 북성동 8 32.07㎡ 부속건물 10.58㎡ [광19.83㎡ 제시외 주택 등 31.8㎡]	단독주택	65,608,230 65,608,23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포함
<b>[대지/임야/전답]</b>					
2017타경 2509	1	여주시 소라면 봉우리 산278 6149㎡	임야	67,639,000 67,639,000	
2018타경 6645	1	보성군 울어진 문양리 665 645㎡ [동소 594 4264㎡]	전	5,922,380 5,922,380	일괄매각, 목책1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7006	2	순천시 황천면 금활리 산132 98597㎡	임야	236,632,800 236,632,800	
2018타경 7785	1	고흥군 남양면 대곡리 514-1 341㎡ [동소 514-5 526㎡ 제시외 518-3 218㎡]	대	15,190,000 15,190,000	일괄매각, 목책1농지취득자격증명요
<b>[자동차, 중기]</b>					
2018타경 6287	1	사물분거지:광양시 광양읍 서평5길 9, 2층 [구산리] 등록번호:20.2W [제시외 건물포함]	자동차	26,000,000 26,000,000	보관장소:순천시 동양로345순천자동차대매사
2018타경 7129	1	사물분거지:순천시 지봉로 485 101동 307호 [조례동, 대주아파트] 등록번호:96로807 7 차량:포타II 파워계이트 연식:2015	자동차	14,000,000 14,000,000	보관장소:순천시 동양로345순천자동차대매사
<b>[기타]</b>					
2018타경 7839	1	선착함:제주시 선착의종류와영칭:기선 박선3001호 선칭:광 흥분수:2116년 기관의종류와유수:디젤기관 1대 추진기의종류와유수:나선추진기 1기 전수연월일:1992년10월 국적취득연월일:2002년12월27일	선박	933,920,000 933,920,000	장착함:광양항 [광양시도이동수출채권양전대이부두부동부동축]
2018타경 8016	1	광양시 광양읍 덕동길 38 1층337.8㎡ 2층3.62㎡ 제시외 공장 등 20.2㎡ [제시외 건물포함] [공장일부, 화장실]매각포함	관리시설	415,828,500 415,828,500	일괄매각, 매각제외 제시외 건물및기게기구 [음파청 및밀착기, 컨테이너사무실, 작업장]있음
2018타경 5190	1	보성군 회천면 금광길 9-43 1층97.11㎡ 2층67.28㎡ 제시외 다용도실 32㎡	단독주택	563,817,760 563,817,760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수목및조경식각포함, 목책8농지취득자격증명요, 목책8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8타경 52174	1	보성군 회천면 금광길 9-43 77.04㎡ [대지 1식]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967-31 86㎡	단독주택		